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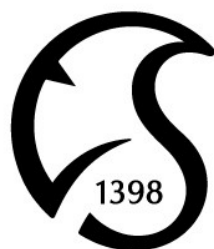
논술시험(인문 1)

< 2021. 11. 20.(토) 인문계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논술시험 (인문 1)

[문제1] <제시문1> ~ <제시문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세계 각국은 언론, 출판, 사상 등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문명 세계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표현의 자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존 밀턴이다. 그가 1644년 발표한 <아레오파지티카>는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명제를 제시했다. 거짓과 진리가 대결과 경쟁을 벌이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레오파지티카>의 일관된 논지이다. 타인의 사상과 사고에 제한 없이 접근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진위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턴은 진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 따른 대중적 인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리에 단지 대결의 장(場)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아이디어는 공개시장에서 자율 조정되어야 한다며 허위의 의견이든 진리의 의견이든 제한 없이 표현되어야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열과 허가의 대안으로는 ‘관용’을 부르짖었다. 진리는 절대자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허위와의 공개적인 대결을 허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며 허위에 대한 관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17세기 ‘종교적 불관용의 시대’에 관용을 호소하고 나선 밀턴의 통찰과 용기는 <아레오파지티카>를 언론자유 의 경전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진리는 승리를 위해 어떤 정책도 전략도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오류가 진리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방어책일 뿐이다. 밀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발전을 불러올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사회가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적 가치를 넘어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아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움직였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등장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가능했다. 밀턴은 기존 지식과 다른 생각에 대해 폐쇄적인 사회는 영원히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아레오파지티카>의 관용 정신은 사회의 유용성, 즉 공공의 복리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바탕이 되었다. 어떤 의견이 잘못된 경우라도 그 의견 표명을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억압하면, 결국 진리와 오류의 대결로 연계 되는, 진리에 대한 보다 명료한 지각과 선명한 인상을 잃게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자유론>의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시문2>

공황은 한 사회가 자원을 흥청망청 탕진한 결과로 개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징벌이 아니기에 ‘죄와 벌’의 교훈극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황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유능한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만 내린다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 역시 과잉투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즉, 한 나라에 자본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충분한 유효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대량 실업과 공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수요가 부족해 공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검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된다. 그래서 경제위기 때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지 말고 지갑을 아낌없이 열어야 한다는 국민 계몽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케인즈는 이와 같은 캠페인이나 교육에 의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선택이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 즉 ‘구성의 모순’을 지적했다. 가령 경기가 나빠 회사가 급여를 삭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태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내가 고용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구성의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개별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즉, 공황의 상황에서는 각자가 저축이 나쁘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내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늘린다면 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려면 구성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경제주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논술시험 (인문 1)

중요하다. 제3의 경제주체란 바로 정부를 뜻한다. 민간으로부터 수요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정부가 수요증대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3>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이 기여한바 혹은 자격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른바 능력주의 원칙이 널리 퍼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자원분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분배 정의에 대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퍼센트의 응답자가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 결과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재자이며, 앞날은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일과 자기 구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연대와 시민의 상호적 책임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하리라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 실패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의 혹독한 면이다. 자신의 운명이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면 최고의 자리에 서는 사람과 최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정당화된다.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장 성공한 사회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이 힘을 얻는다. 즉,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굳건한 국가는 사회적 복지에 대해 인식해줄 수밖에 없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일자리와 기회가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다고 확인만 해주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이 중산층조차 되지 못한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 계층에 태어난 사람 중 겨우 4~7퍼센트만 최상위층에 도달한다고 한다. 성공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선(共同善)을 해칠 수도 있다. 능력주의 방식의 인재 선별은 완벽하지도 않거니와, 설령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선별되기 위한 극단적 경쟁의 고통과 선별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좌절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쾌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고, 하면 된다’라는 약속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비전은 공동의 민주적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한다.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공동체적 연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덜 성공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 있다. 공동체 속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준 보상은 개인의 재능과 업적 때문만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이 생겨난다. 이러한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제시문4>

한 경제학자는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만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가 일단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정부나 사회 전체의 계획과 같은 ‘보이는 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함께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조건으로 공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 놓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반칙하지 말고 규칙을 지키며 경쟁해야만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이자 의사결정 주체인 개인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예컨대, 개인은 눈가리개를 두른 말과 같은 존재로, 눈가리개 안에서 보이는 정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개인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논술시험 (인문 1)

이는 정치가이든 경제학자이든 어떠한 개인도 사회 전체를 전망하거나 계획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시장은 ‘가격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질서로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장은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와 정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다. 또한 시장은 자의적이거나 특수한 명령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추상적 원리의 강제’에 의거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이며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모여 만든 시장은 화폐·언어·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출현한 자생적 질서의 하나가 된다. 즉, 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개인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일정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전계획 없이도 인간 활동을 조직하며 사회에 자연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공동체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계획이나 정책을 통해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오만’으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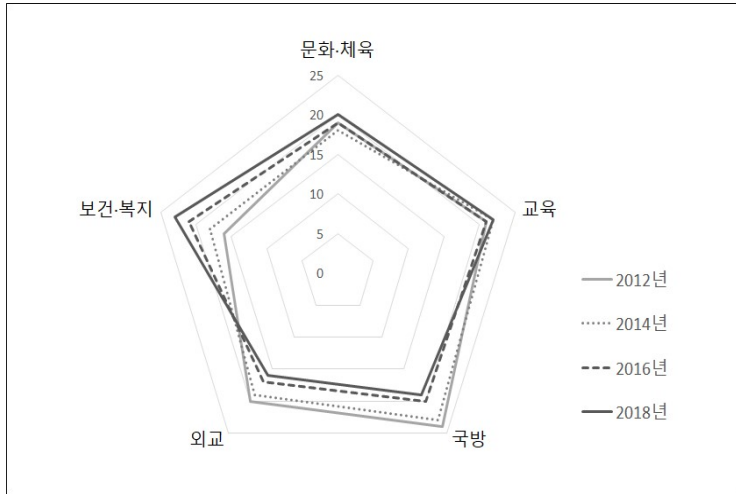
논술시험 (인문 1)

[문제2] <사례1>과 <사례2>에 각각 제시된 두 국가 A, B의 자료를 해석하고, 각 사례가 [문제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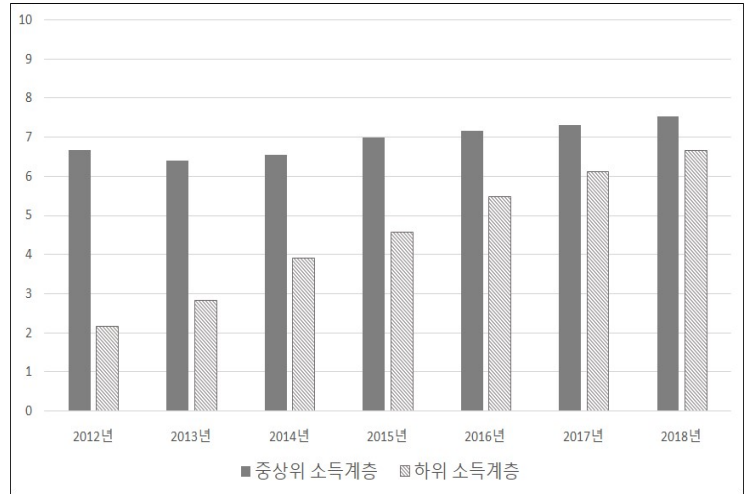
<사례1>

아래의 <그림1-1>과 <그림1-2>는 각각 A국의 예산지출의 항목별 비중과 소득계층별 행복지수를 보여준다.

<그림1-1> A국의 예산지출의 항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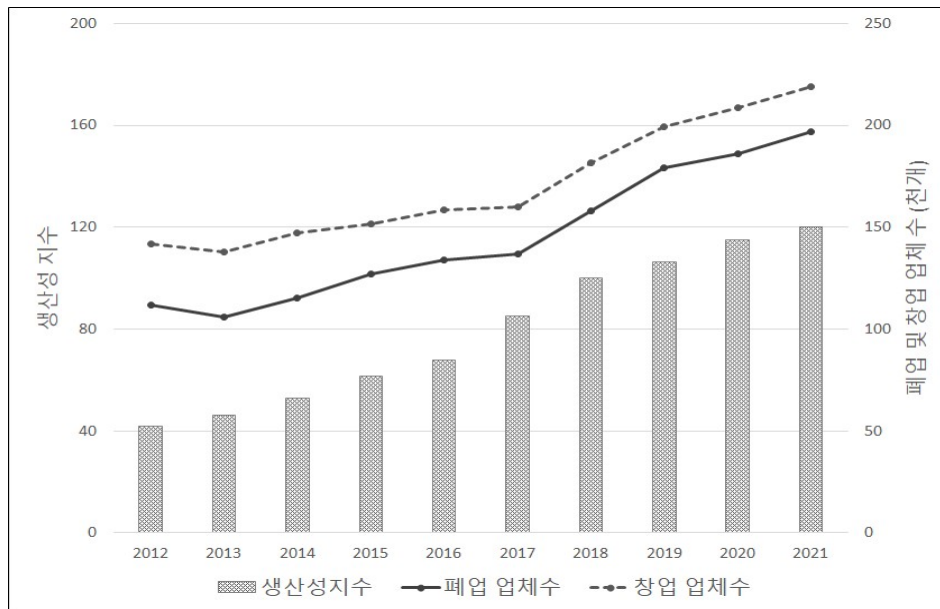
<그림1-2> A국의 소득계층별 행복지수



- 주1) 모든 연도에 A국의 예산지출 총액은 동일하며 보건·복지, 문화·체육, 교육, 국방, 외교 이외의 예산지출 항목은 없다.
- 주2) 모든 연도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사례2>

아래 자료는 B국 소비재 산업의 생산성 지수와 사업자 폐업 및 창업 동향을 보여준다. B국은 2013년부터 소비재 산업 내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인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였다.



- 주1) 생산성 지수는 노동 및 자본 투입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로 정의하며 2018년을 기준연도(2018=100.0)로 하여 측정한다.
- 주2) 모든 연도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문제3] C국에서는 최근 도심 지역의 주택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도제한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사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이다.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사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20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2)

< 2021. 11. 20.(토) 인문계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1] <제시문1> ~ <제시문4>는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우리는 누구나 환경오염자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석유로 난방을 하며, 우리가 사용한 유연제는 해양생물에 피해를 입힌다. 우리가 모든 편리함을 버리고 가장 검소하게 살아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환경은 우리와 독립된 외부적 요인이 아니며, 우리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자유는 대부분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자유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법은 필연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가 포괄적이고 완전할수록 다양한 행위 영역에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환경에 부담이 되는 모든 행위의 금지는 인간의 자유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 기반 자체가 이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환경보호가 행정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법·제도로 행위규제를 했을 때만큼 효과를 낼 수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법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배기가스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며, 난방을 2~3도 낮게 설정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거나 적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신의 습관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자율성에만 맡긴다면 소수의 이상주의자만이 개인적인 희생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시민의 절대 다수가 환경보호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해 높은 비용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 6월 8일 독일에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없는 일요일’ 시위가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9%가 일요일 하루 자동차 타는 것을 그만둘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는 등 시민, 환경보호 단체,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실제 시위 참가자는 매우 적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동차 운전자의 대다수가 ‘자동차 없는 일요일’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 운행이 없는 조용한 일요일은 애초에 개인들이 스스로 행동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자신이 자동차를 주차장에 둔 채로 지낸다면 분명히 유해물질의 배출 감소에 어느 정도 공헌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선택을 주저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협조 없이는 ‘자동차 없는 일요일’에 기대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동차의 운행을 멈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친환경적 행동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개인의 이익 혹은 불이익과 결부되지 않는 한 환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희생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법·제도의 역할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익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추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제시문2>

군주는 신하의 간언(諫言)을 잘 들어야만 좋은 군주가 된다. 그런데 만약 신하가 간언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군주가 될 기회가 없다. 그렇다면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체로 군주는 하늘처럼 크고 하늘처럼 존귀하며 번개와 우레처럼 위엄스럽다. 사람이 하늘에 대항할 수 없고 하늘을 범할 수 없으며 번개와 우레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성인이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권장했으니, “흥성(興盛)한 왕은 간언을 하는 신하에게 상을 내려주었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겁이 많고 아침을 잘하여 군주의 잘못에 대해 간언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형벌을 만들어 위협했으니, “신하가 바르지 않으면 형벌을 가했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는 상을 거부하거나 형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간언하지 않겠는가? 상과 형벌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한 어찌 하늘에 대항하고 번개와 우레를 거역하겠는가?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용감하고, 한 사람은 용감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며, 또 한 사람은 비겁하다. 그들과 함께 깊은 계곡의 절벽 위에 서서, 그들에게 “여기를 뛰어서 건너가면 용감한 행동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겁한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면, 저 ‘용감한 사람’은 비겁함을 부끄러워하여 반드시 뛰어서 건널

것이다. ‘용감하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과 ‘비겁하기만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그들에게 “여기를 뛰어서 건너가는 자에게는 천금(千金)을 줄 것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용감하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은 이익을 탐내어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나 비겁하기만 한 사람은 여전히 주저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나운 호랑이가 무섭게 달려드는 상황을 만난다면, 비겁하기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도 하기 전에 빠르게 절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찌 용감함과 비겁함이 있겠는가? 요점은 형세(形勢)로 알아붙이는 데 있을 따름이다. 임금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것은 깊은 계곡을 뛰어넘는 것과 같다. 이른바 성품이 충성스럽고 의로워서 상을 좋아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며 반드시 간언을 한다. 상을 좋아하는 자는 용감함과 비겁함이 반반인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어야 간언을 한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간언을 한다. 이전의 뛰어난 왕들은 용감한 자를 항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금으로써의 상을 주었고, 호랑이로써의 형벌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달려갈 곳이 있도록 하고 뒤로는 피할 곳이 있도록 하여, 그 형세상 왕의 과실을 바로잡는 강력한 간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이 고대의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왕조가 흥성한 까닭이다. 그런데 쇠퇴한 말세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간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간언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었다. 따라서 신하가 입을 꼭 다물고 전혀 간언하지 않았으니, 난리가 일어나고 패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현명한 군주가 자기의 잘못을 듣고 싶을 때에도 상을 주고 나서야 비로소 간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시문3>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싸우고 빼앗는 일이 생기며 사양(辭讓)하는 일이 없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니,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심과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니,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나친 혼란이 생기며 예의와 아름다운 격식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싸우고 빼앗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힘으로써 난폭한 상태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스승의 법도를 통한 교화와 예의를 통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야 남에게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격식을 갖게 됨으로써 잘 다스려지는 상태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스승의 법도가 없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위협하여 바르지 않을 것이며,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고 난폭한 짓을 하여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고, 추우면 따뜻해지기를 원하며, 힘들면 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어른을 보면 감히 먼저 먹지 않는 것은 사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히 어른보다 먼저 쉬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를 대신하여 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사양하며,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하고 아우가 형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동물과 달리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본성에 반대되고 감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성과 감정이 생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려(思慮) 작용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사려에 의해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적 행위이다. 이러한 의지적 행위는 마음의 사려가 축적되고 그 사려에 따른 행동이 오랜 기간 습관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실천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길거리의 사람도 모두 다 우(禹)임금과 같은 훌륭한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우임금이 우임금으로서 존경을 받는 까닭은 그가 인자함과 의로움과 올바른 법도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인자함과 의로움과 올바른 법도를 알 수 있는 자질과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는 아버지와 자식의 올바른 도리를 알고 밖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올바른 관계를 안다. 만약 그들이 도를 익히는 학문을 하며 전심전력으로 사색하고 고찰하여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선을 쌓으면, 마침내 밝은 이치에 통달하고 하늘과 땅의 변화에 맞추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모두 우임금과 같은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성인은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이룬 결과이다.

<제시문4>

부모가 2~10세 사이의 자녀와 나누는 말의 70%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개입이다. 부모의 개입에는 전형적으로 세 가지 기법이 동원된다. 첫 번째는 힘을 행사하는 경우로, 협박이나 완력의 사용, 장난감·TV·컴퓨터 따위의 압수 등을 동원하는 강제적인 개입방식이다. 두 번째는 애정을 철회하는 경우로, 아이를 어른의 규범에

논술시험 (인문 2)

복종시키고 아이가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아이를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귀납적 추론 방식으로, 아이의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는지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도덕원칙의 내면화와 공감능력 수준을 평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힘의 행사는 도덕교육에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애정의 철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납적 추론은 부모님을 닮고 싶다는 욕망, 도덕규범의 내면화, 공감능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의 관심을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결과’에 집중시키도록 한다. 부모가 이와 같은 상황을 아이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부모의 개입이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심지어 자기의 자유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거부반응이 덜하게 된다. 또한 귀납적 추론은 아이에게 불안감을 경감시켜주며, 도덕규범의 내면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아이에게 이타적 행동을 유도하고 공감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아이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이 타인에게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미치게 될지 상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그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죄의식을 갖도록 한다. 인간은 이미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인간은 도덕적 주체성과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개입방식 중의 하나인 귀납적 추론은 성장과정에서 아이에게 도덕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덕적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귀납적 추론을 통해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도덕적 주체성과 도덕원칙을 계발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반면, 힘의 행사나 애정의 철회는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덕적 성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도덕적 성숙이 모든 인간의 의무임을 인식시키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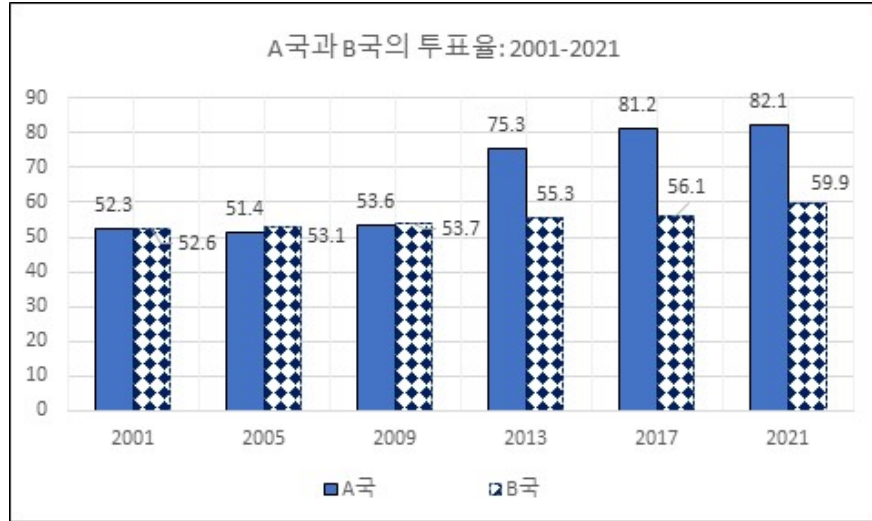
논술시험 (인문 2)

[문제2] 아래 <자료1>, <자료2>, <자료3>을 활용하여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40점)

A국과 B국은 시민의 투표율을 높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였다. A국은 유권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의무투표제를 2012년도부터 실시하여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B국은 2012년도부터 선거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정책 시행 전후로 A국과 B국에서는 아래 <자료1>, <자료2>, <자료3>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1>

(단위:%)



* 위 자료는 연도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임. 조사기간 동안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2>

(단위:%)

구분	A국		B국	
	2009	2021	2009	2021
소득 1분위 투표율	48.6	91.1	47.1	52.2
소득 2~9분위 투표율	53.1	83.0	53.3	59.6
소득 10분위 투표율	63.2	66.3	62.9	70.3
무효표 비율	2.3	19.2	2.5	1.9

* 무효표는 투표한 표 중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는 표임

* 위 자료는 연도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임. 조사기간 동안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 소득 1분위는 최하위 10%의 소득계층을, 소득 10분위는 최상위 10%의 소득계층을 가리킴

<자료3>

(단위:%)

구분	A국		B국	
	2009	2021	2009	2021
'정당 및 시민단체에서 적극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	15.3	11.7	16.0	22.3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고 응답한 비율	52.8	48.2	53.7	59.2
'정책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응답한 비율	23.2	15.9	24.3	28.9

* 위 자료는 연도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임. 조사기간 동안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문제3] C국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 난민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난민 수용 및 지원이 초래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C국 국민으로서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자신의 선택을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3)

< 2021. 11. 20.(토) 인문계 3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1] <제시문1> ~ <제시문4>는 인간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인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나 기법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우리는 물질세계에서 실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장비들을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술은 인간의 지성을 표현하는 결정체이다. 이러한 기술이 만들어내는 법칙이 생활의 모든 단면에 침투하여 끊임없이 수단의 개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대문명은 찬란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우리는 연장과 장비를 탁월하게 사용하는 동물이며 기술은 문명의 모든 요소들을 정복해왔다. 근본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인지 알고 싶다면, 삶에서 맞부딪치는 물질적 도전과 조건, 특히 유기체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보편적 필요를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와 그에 부합하려고 인간이 취하는 방법은 경제적 실재, 즉 경제적 현실이다. 유창한 철학자들이 아무리 사실을 기만하더라도, 이런 실재가 현실에서 세계를 지배한다. 철학 체계, 문화 양식, 정치 이론, 종교적 신념 등은 그 자체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보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이며 배후에 있는 경제 현실의 산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 비로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즉 ‘노하우(know-how)’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자에게 국가는 자신이 개발한 수단을 적용하는 또 하나의 영역일 뿐이다. 기술자에게 국가는 인간 의지의 표현도 아니며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물도 아니며 계급투쟁의 산물도 아니다. 국가는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술자는 국가를 상대적 정의 면에서 판단하지 않고 기술을 이용하는 국가의 능력 면에서 판단한다. 그들에게 정치란 상대방과 기술을 경쟁하는 터전이다. 정치적 이념은 무엇이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유용한가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본질에 대한 논쟁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효율성을 갖춘 실용적인 해결책이야말로 기존의 것에서 실마리를 찾고, 그때그때마다 옳다고 간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따라서 훈련에 의해 다듬어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시문2>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기보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원한다. 다국적 거대제약사가 백신 프로젝트에 큰 자금투입을 꺼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백신개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백신개발의 성공여부는 지나치게 불투명하며, 백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익률 대비 성공률이 낮다. 둘째, 백신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나라는 백신의 높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다. 즉, 거대제약사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장사인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 등에서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회사들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약사는 한 번의 접종으로 해당 질병에 평생 면역력을 갖게 되는 백신개발사업에 결코 뛰어들지 않는다. 백신이라는 과학의 선물은 분명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다는 인본주의에 기대고 있지만, 백신을 생산하는 거대제약사의 자본주의적 속성과는 애초부터 공존이 불가능한 셈이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자국민에게 백신 추가접종을 승인했고, 백신을 공급하는 거대제약사들은 이를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마자 추가접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백신이 정말 필요한 곳은 가난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반인본주의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이 탐욕적인 거대제약사의 이익추구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공황으로 만든 상황에서 과연 백신을 생산하는 거대제약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백신이라는 과학기술의 결정체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인본주의, 윤리적 가치, 평등과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이상(理想)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은 그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개발은 거대제약사와 민간의 엄청난 투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만, 그 개발의 여정은 결코 거대제약사의 자본주의적 실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공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백신으로 인류를 구하겠다는 인본주의적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몇몇 과학자들의 끈기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백신기술의 활로를 찾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은 백신이 생산되고 전 세계에

수급되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거대제약사는 각국 정부와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고, 이 와중에 저소득 국가는 백신수급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태다. 백신을 선진국에 우선 공급하는 현재의 상황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실수이다. 분명 과학기술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인류에 제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제공된 기술이 인본주의적인 이상에만 기반 해 사용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로,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지식을 발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을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3>

우리가 어떤 행위가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어떤 원형이나 규범, 즉 ‘좋은’과 비교해야만 한다. 그 행위가 이 원형과 유사한 한, 그 행위는 좋은 것이다. 좋음이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개념들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어떤 것을 파악한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는 이 ‘어떤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객관적 실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 주위에 있는 독립적 객체처럼 지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유의 대상인가? 플라톤은 하나의 이데아로서의 ‘좋은’에 대한 이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원이나 삼각형 같은 개념들(이데아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특정 원들과 삼각형들은 그것들에 해당하는 이데아들의 소멸 가능한 재현에 해당한다. 변화 가능한 이런 재현과는 대조적으로 이데아들은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다. 그리고 이데아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보편타당하다. 우리가 ‘좋은 행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얼음이 언 호수에서 얼음이 깨져 익사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좋은 행위이다. 그럼 이 행위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빙판 위로 달려 나가는 것? 사람이 빠진 빙판 위로 사다리를 끌어다 놓는 것? 그 사다리를 끌어당기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좋음이다’라고 가리킬 수도 없고 좋음을 볼 수도 없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행위가 좋은 행위라고 확신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그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이해하는 이데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데아에 대한 통상적 해석을 견지한다면,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불변적이다. 영화에 나오는 검은 말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다. 그러나 말의 이데아는 항상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좋음은 하나의 이데아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든 말든, 그것에 대해 알든 모르든, 언제나 변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적 가치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실용주의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이데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지각의 세계가 동등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이데아들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즉 이데아들은 이상적이라고 믿었다. 이데아들은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상을 제시한다. 그런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자연이 모두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누리는 사회이다. 도덕이나 윤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도덕의 가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에도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 이상들에 대한 동경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플라톤적 에로스(Eros)다. 즉, 아름다움과 좋음과 참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한 동경이다. 이처럼 플라톤은 도덕성이 다양한 인간의 의견이나 관습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데아론은 윤리적-정치적 규범과 가치에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토대를 확보해주었다.

<제시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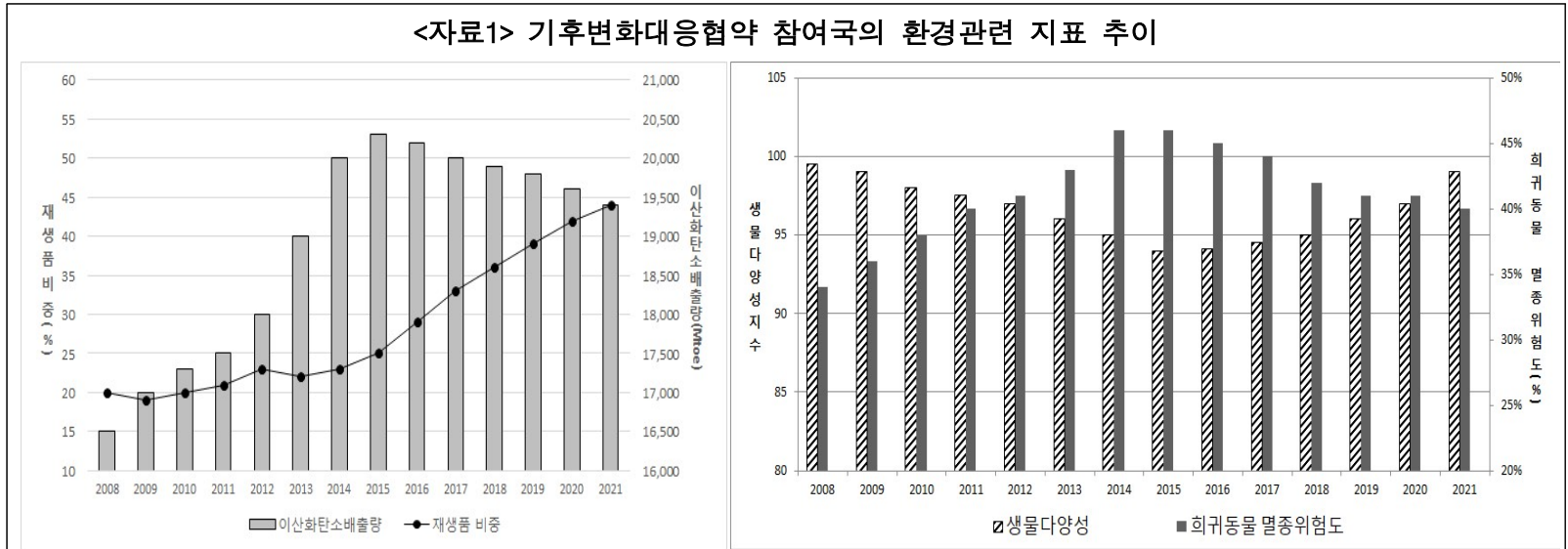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힌다.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할망정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어떤 가치를 이상으로 상정해 놓은 문명에서는 그 상정된 가치를 향해 인간을 내몰아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상정된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도록 요구하는데, 노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위

글은 단순히 지나친 자극을 피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냥꾼들을 내달리도록 만드는 정해진 목표는 바로 그 사회가 공통으로 인정한 어떤 가치이자 이상이다. 유가(儒家)의 예를 빌리면 바로 도덕적 가능성을 본질로 가진 인간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 완성이자 도덕적 사회 건설 같은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면 모두 배제하고 억압한다. 합의된 가치로부터 이탈된 것에 대해서는 광포할 정도의 억압과 폭력을 가하는 것마저도 허락된다. 얻기 어려운 재화도 일정한 가치체계 안에서의 일이며, 가치 집중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행위를 정당한 궤도로부터 이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할망정 눈을 위하지 않는다. 여기서 배는 타고난 자연 상태 그대로의 것이다. 인위적 가치체계가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이다. 배가 고프다거나 부르다는 판단은 어떤 체계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다. 아주 직접적이다. 배는 나에게 있는 것을 느끼지만, 눈은 밖을 향해 뚫려 있으면서 내가 아닌 저 멀리 있는 것을 본다. 배는 바로 내 몸에 있는 ‘이것’이고, 눈은 항상 밖에 있는 ‘저것’을 향해 열려 있다. 어떤 가치 체계나 이상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이 세계를 벗어나 저 멀리 있는 것들이다. 유가의 전통은 무엇인가? 성인이 만들고 성인이 전하는 성인의 말씀은 바로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상으로 우리가 내달려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떤 이상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내하였는가? 엄격한 금욕주의, 배타적 근본주의 등이 깃들이는 곳이 바로 그 이상이 굳건히 자리 잡힌 체계 안이다. 노자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상이나 체계를 상정하지 말자고 한다.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의 운행 원리를 모델로 하여 소박하게 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저 멀리 정해져 있는 이상이나 체계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는 곳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공자를 위시한 유가나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근대철학은 우리의 저 앞이나 혹은 위에 우리가 가야할 이상으로 어떤 체계를 설정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종하게 한다. 그래서 저 멀리 설정되어 있는 체계와 이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는 학(學)과 습(習)을 강조하며, 우리의 본성도 ‘저쪽’을 향하여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노자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그런 이상은 권력으로 행사될 뿐, 우리에게 전면적인 성과를 약속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본성도 저 멀리 매달려 있는 이상이나 체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본성을 향하여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논술시험 (인문 3)

[문제2] <자료1>과 <자료2>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기후변화대응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의 변화상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1>과 <자료2>를 [문제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40점)



- 주1) 재생품 비중은 전체 소비시장에서 재생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주2) 생물다양성 지수는 값이 클수록 좋음을 의미

<자료2> A(선진국), B(개발도상국)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실업률, 친환경 산업 비중

국가	연도	1인당 국민총소득	실업률	친환경 산업 비중
A	2010	\$42,000	4%	40%
	2015	\$46,000	3.9%	45%
	2020	\$55,000	3.2%	70%
B	2010	\$1,800	15%	4.1%
	2015	\$1,700	16%	4.0%
	2020	\$1,000	25%	7.8%

주3) 두 국가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문제3] 인접국과 군사 분쟁이 잦았던 C국의 정부는 지뢰 매설 지역에 교도소를 건설하기 위해, 매설된 지뢰의 위치를 찾는 탐지견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동물복지를 위해 지뢰탐지견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청원에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